

(산업부 중점 분야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산업 전반의 AX 확산 5651억 → 1조1347억	통상·수출 대응 강화 1조340억 → 1조7353억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1851억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1575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6005억원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500억원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1조3026억 → 1조6458억	공급망 강화 1조7879억 → 1조9993억
반도체 4685억 이차전지 804억 바이오 3493억 디스플레이 776억 조선 2302억	소재부품기술개발(R&D) 1조2909억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350억원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 8973억 → 1조2703억	5극3특 균형성장 7563억 → 8835억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648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021억원	지역투자촉진(세종 계정 포함) 2564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 4073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 원전 예산은 5194억원 (전년 대비 6.2% 증액)

내년 예산 13.8조 역대 최대 규모 AI·반도체·재생에너지 집중 투자

제조업 혁신 위한 AX 투자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분산전력망 투자 강화
무역보험·바우처로 기업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조4443억원(21.4%)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신학 사업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이번 예산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형적·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산업 전반의 AX (Advanced Transformation) 확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X 예산을 올해 5651억원에서 내년 1조1347억원으로 두 배(100.8%) 확대했다. 자율제조 AI 팩토리 2030년까지 500개 구축해 생산성 30% 향상, 제조비용 20%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 팩토리와 산업 AI 솔루션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이 신규로 포함됐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2323억원에서 4685억원으로 101.7% 늘었다.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 (1157억원),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392억원)에 집중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380억원에서 776억원으로 104.3% 증액됐다. 배터리·조선 등 주력산업 전반의 R&D 지원도 강화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8973억원에서 내년 1조2703억원으로 41.6%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보급지원도 2021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1196억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100억원)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수출 예산도 올해 1조340억원에서 내년 1조7353억원으로 67.8%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800억원에서 600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긴급 바우처(424억원) 신설을 통해 관세 충격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생산거점 이전을 지원한다.

문 차관은 무보 급금과 관련해 대미 관세협상 3500억달러 규모 투자펀드 조성 관련이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노란봉투법 기대·우려 안해 산재 사망 감축에 직 걸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취임 한달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 진단
교섭 표준모델·시물레이션 등
상생 교섭 촉진 방안 마련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는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협력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도 “직을 걸겠다는 말은 즉흥적인 수사가 아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산재 사망 감축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언급하며 “노사가 대화를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면서도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사정이 협력해야 성장과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시물레이션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감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일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한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공공부문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을 2023년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0

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상습적·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구조적 산업 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되며,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TF에는 참여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대화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노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약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5조 달성’ 공판사업 판로발굴·사업확대 논의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 워크숍
산지 발굴 등 유통변화 선제 대응

농협경제지주가 전국단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산물의 판로 발굴 및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제주에서 ‘2025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워크숍’이 열렸다. 행사에는 산지도매 본부장, 협의회참여 농협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사업 부문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자는 ▲농산물 유통트렌드 및 공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농협공판장 운영현황 및 당면현안 공유 ▲제주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산지출하 현황 조사 등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판장 신규산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유통환경 변화에 선



농협 관계자들이 지난달 하순 제주에서 열린 ‘2025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있다. /농협중앙회

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행사에서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은 “농협공판장은 농업인의 든든한 판로이자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는 공익적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뜻과 정성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는 농협공판장의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출범했다. 공판사업을 추진 중인 63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내년 농식품 예산 사상 첫 20조 넘겨

농업 세대전환 촉진 등에 9.3조
기후대처·AI 스마트농업 등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위해 20조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6.9% 늘어난 20조3500억원을 책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당 부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은 2020년의 7.6% 이후 가장 높다.

주요 투자로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강화에 5조3492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에 9조3712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에 1조8955억원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에 1조6990억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에 493억원을 투입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있어 농식품부도 충실히 사업을 조정하고 실제 집행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올해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원면적은 20만5000헥타르(ha)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하계조사료·옥수수·깨는 ha당 50만 원 늘린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매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186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뒷받침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4200ha로 확대하고 1조617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도 200ha를 공급해 예산도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김연세 기자